



정치 > 국회·정당

'DMZ 평화적이용' 5년마다 종합계획...전해철, 법률 제정 추진

"통일부에 DMZ평화이용위원회 설치"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10-20 14:31 송고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한다. 2020.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비무장지대(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협의해 DMZ평화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DMZ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런 법률을 통해 남북 간의 합의,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서 DMZ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DMZ와 관련한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법을 제정해 DMZ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